

국민 불편 초래하는 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 일방적 주장을 위한 파업 돌입에 유감 ... 비상수송대책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여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21.3~’22.12)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토부는 9월 9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하여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며, 파업 전날인 9월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평시대비 70% 수준)할 계획이다.
 -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1,3,4호선 지하철 증편, 광역·시내·시외버스 증차, 수요에 맞춰 전세·예비차도 충분히 투입

-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과 연휴 등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철도노조에 촉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철도국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970)
		담당자	사무관	이기찬 (044-201-4774)

